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세부내용,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을 정함(안 제16조의2)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박마다 작성하는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원양어선 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3)

안전관리지침의 수립·이행 및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 방법, 이의제기 및 징수 절차 등을 규정(안 제20조의2·제20조의3·제20조의4·제20조의5·제20조의6)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을 한 원양어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부과·납부·징수하는 방법, 이의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법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제4장에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의 “도매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수산물의 도매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산물에 대한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수입 신고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그 밖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이의신청) ① 제20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6조의2(안전관리지침의 작성 등) 법 제28조의2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16조의3(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인원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략)	제19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신 설>	제20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본문의 “도매가격”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수산

<신 설>

물의 도매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산물에 대한 도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수입 신고된 금액을 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2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그 밖에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신 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이의신청) ① 제20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

<신 설>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의5(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지침의 내용 (제16조의2 관련)

구 분	내 용
1. 해상에서의 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2)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조치내용의 수립 3)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비상대책을 포함하여 육상직원 및 선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나. 가목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육상직원 및 선원이 이를 이행·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지침과 관련된 육상직원 및 선원의 책임·권한 및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원 및 육상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에 관한 사항	가. 원양어업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육상직원으로서 영 제16조의3 및 별표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오염방지활동을 감시하며, 필요한 자원과 육상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선장의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목표 및 방침의 시행 2) 해상종사원이 안전관리체제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동기의 부여 3) 간단명료한 지시 및 지침의 전달 4)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여부 확인 5) 안전관리지침의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의 안전관리책임자에게의 보고

	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선장의 최우선적인 결정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2) 필요시 회사에 대한 지원요청
5. 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선장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선원을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2) 회사의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숙지 3)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제공 나. 원양어업자는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고 해당 자격증서를 가진 건강한 선원의 승선 2) 모든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선원의 승선 다.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하는 육상직원 및 선원이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모든 선원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출항 전에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지침을 문서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지침과 관련된 육상직원 및 선원들이 관련 법령·규칙·규약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지침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훈련절차를 수립·유지하고 관련된 육상직원 및 선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지침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선원들이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상운용(船上運用)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가.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한 주요 확인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가. 선박의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연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선박과 관련한 위험·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조직이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 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발생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사·분석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선박이 관련 법령 및 자체수립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기적인 검사 2) 1)의 검사에 관한 모든 부적합사항(추정원인을 포함한다)의 보고 및 시정조치 3) 1) 및 2)의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다. 갑자기 작동이 정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설비 및 기능을 식별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절차 수립에는 설비 및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예비설비 및 기술적 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나목 2)에 따른 주기적인 검사 및 라목에 따른 설비 및 기술적 체계의 향상방법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정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10. 문서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전관리지침과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나.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관련 부서에서는 안전관리체제와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 문서만을 사용할 것 2) 문서의 개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검토·승인할 것 3) 무효화된 문서는 신속히 폐기할 것

다. 문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별표 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 (제16조의3 관련)

구분		기 준
자격기준	경력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5급 운항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원양어선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선박 안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교육기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수료한 사람 1. 안전관리지침 수립·운영 관련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2. 조사, 질문, 평가 등 심사기법 및 안전경영의 기술 3.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내부 심사의 이론 및 기법 4. 선박운항의 지식 및 육상직원 및 선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원		1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위 표에 따른 경력기준 및 교육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위 표의 근무경력에는 1년 이상의 승선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위 표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은 정부대행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4. 사업장 소속 선박이 1척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경력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의2제4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31조의2 각 항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가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나목에 따른 수산물 가액 수준,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따른 조정과 다목에 따른 외부 요인 등에 따른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다.

가. 산정기준

- 1) 위반행위로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최근 3개년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징금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수산물 가액 수준과 위반행위의 기간 등에 따른 조정

- 1) 수산물 가액의 수준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2) 위반행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기준의 100분의 250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3)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 조정한다.

다. 외부요인 등에 따른 조정

- 1)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 2) 이 법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에서 벌금,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

우에는 그 부과받은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 3) 위반한 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기본 산정기준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원양산업과	
연 락 처	044-200-5366